

8월에도 입법·표결·필리버스터·거부권 ‘철타쿠 국회’ 예고

입시국회 개최... 방송 4법·채상병특검법·검사탄핵 청문회 이어져 민주, 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처리...국힘, 거부권 행사 요청키로

5일 문을 여는 '8월 입시국회'에서도 여야의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등 거부권 카드로 맞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장 8월 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선 방송 4법, 25만원 지원법과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에 대해선 예의 없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가량 걸리고,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중순께 6개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통령도 이들 법안에 모두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계휴가 및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

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철타쿠 정쟁은 결국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부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했다. 또 국민의힘은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민주당은 서민경제 회복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채상병특검법'도 8월 국회의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김경의 선(先) 수사'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

표의 '제삼차 추천 방식 특검법'의 수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당 내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한 대표가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제삼차 추천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도 전운이 감돈다.

민주당은 14일 법사에서 김경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 김경철 여사 의혹 공세를 이어간다.

이같은 김 여사가 연루된 코베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뺑뺑이'로 일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로 맞불을 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방위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야당의 이 방위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대치도 8월 국회로 고스란히 넘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과방위를 무대로 6일 방위위 현장 검증,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조사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수인 최민희 방위위원장에 대한 제명추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본회의 상정·의결이 필요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여야 합의가 없는 국조는 불가하다는 점을 설득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본격 '친정 체제' 구축

당직 인선...지명직 최고위원 김종혁·전략기획부총장 신지호 유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 정적 전 정책위의장 교체 이후 후속 당직 인선을 통해 '친정 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자신의 당 대선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부총장, 대변인단 등 후속 당직 인선에서 이른바 '한동훈의 사람'을 중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오는 5일 발표가 예상되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

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기획부총장 역시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 단계로 알려졌다. 여기에 각각 신입 홍보본부장·대변인으로 거론되는 장서정 전 비상대책위원,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조직부총장에는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원내에서 우선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의원 등 비주류 성향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현 흥영림 원장 재선임 가능성이 있지만, 한 대표 주변에서는 전당대회 캠프 때부터 조력해온 현역 의원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대표는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에 친한계 서범수 의원을 기용했고 비서실장으로는 역시 친한계인 박정하 의원을 임명했다. 이어 친윤계 정적 전 정책위의장 후임에 대구·경북(TK) 지역 4선인 김삼훈 의원을 내정했다.

한 대표의 당직 인선 포석은 당무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 구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직인 정책위의장에 이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인선이 완료되면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이 친한계 또는 한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채워진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오늘부터 여름휴가

휴가지서도 현안보고 받아...국정상황 따라 휴가기간 유동적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한편, 하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정국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대부분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보낼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여름휴가 첫날 LS그룹의 대규모 이차전지 투자가 이뤄진 전북 군산을 찾았고, 이틀째는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한 후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가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로 이동했다.

올해도 윤 대통령은 전국 곳곳을 옮겨 다니며 제북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틈틈이 재래시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휴가 기간도 유동적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운영에 차질을 빚은 세계스카우트센터비 운영 상황과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올해 휴가 역시 국정 상황에 따라 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국정 현안 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부 참모는 윤 대통령과 함께 휴가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 대비 태세를 비롯해 채권자만 11만여명에 달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사태 등 급박한 국정 현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오는 15일 첫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과 다음 달 예정된 제2회 원전 협력 상향 등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도 국정 운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권익위, 지방의회 주민 방청 절차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4개 지방의회에 주민 방청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난 2일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지방의회 의사(議事) 공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방청 제한 사례에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회의록 공개 기한을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

하도록 했다. 또 기초의회에는 비공개 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 중계와 영상 회의록 공개를 보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권익위 민생심사 권익개선정책과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권고와 지방의회에 신속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9개> *QR코드는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m]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3타경 4612	1	고흥군 두원면 문대리 533 322㎡	공갈창지	419,321,500	일괄매각, 제시외권 [중흥에스-클래스3단지] 84,9984㎡ 남고서성미남관리비200,000원및여수신선시 미리확인요함
		동소 533-2 704㎡	공갈창지	419,321,500	
		동소 533-3 1020㎡	공갈창지		
		고흥군 두원면 금요길 6 [제1호] 단층 64.18㎡	사무소		
		제시외 휴게실 14.3㎡			
		동소 6 [제1호] 단층 535.45㎡ 제시외 창고4㎡	근린시설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33, 1층 109호 [남계	상가	218,000,000	
		매디컬빌딩 제1호] 38.43㎡	상가	218,000,000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33, 1층 110호 [남계	상가	256,000,000	
		매디컬빌딩 제1호] 45.689㎡	상가	256,000,000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33, 1층 111호 [남계	상가	246,000,000	
		매디컬빌딩 제1호] 43.981㎡	상가	246,000,000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33, 2층 204호 [남계	상가	353,000,000	
		매디컬빌딩 제1호] 135.376㎡	상가	353,000,000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33, 2층 205호 [남계	상가	224,000,000			
매디컬빌딩 제1호] 92.232㎡	상가	224,000,000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33, 3층 301호 [남계	상가	427,000,000			
매디컬빌딩 제1호] 139.04㎡	상가	427,000,000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33, 3층 302호 [남계	상가	414,000,000			
매디컬빌딩 제1호] 134.83㎡	상가	414,000,000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33, 3층 304호 [남계	상가	329,000,000			
매디컬빌딩 제1호] 135.376㎡	상가	329,000,000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33, 3층 305호 [남계	상가	191,000,000			
매디컬빌딩 제1호] 92.232㎡	상가	191,000,000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33, 4층 401호 [남계	상가	412,000,000			
매디컬빌딩 제1호] 139.04㎡	상가	412,000,000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33, 4층 402호 [남계	상가	400,000,000			
매디컬빌딩 제1호] 134.83㎡	상가	400,000,000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33, 4층 403호 [남계	상가	352,000,000			
매디컬빌딩 제1호] 114.385㎡	상가	352,000,000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33, 4층 404호 [남계	상가	305,000,000			
매디컬빌딩 제1호] 135.376㎡	상가	305,000,000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33, 4층 405호 [남계	상가	185,000,000			
매디컬빌딩 제1호] 92.232㎡	상가	185,000,000			
2023타경 58084	1	여수시 여서동 223-3 396.2㎡	대	1,911,713,600	일괄매각, 제시외권 불포함
2023타경 58145	1	여수시 여서동 95-9 지하1층281㎡ 1층84.13㎡ 2-6층각243.72㎡ 제시외 창고28㎡	유용주점, 여관	2,435,380,300	일괄매각, 제시외권 불포함
2023타경 58145	1	순천시 해룡면 후리리 1014-1 2184㎡ 제시외 창고면적783.1㎡	대	2,435,380,300	일괄매각, 제시외권 불포함
2023타경 58145	1	순천시 해룡면 여수리 1288 가동호 지하1층 256.41㎡ 1-5층각332.64㎡ 6층102.95㎡ 순천시 해룡면 중리리 1014-5 303㎡ [공유자이대평회158/303지분]	숙박시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m]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3타경 55733	1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96, 310동 14층 1402호 [중흥에스-클래스3단지] 84,9984㎡ (현황조사보고서상미남관리비200,000원및여수신선시미리확인요함)	아파트	360,000,000	2024타경50896 [병합]
		광양시 광성로84, 303동 6층 601호 [중흥,성호아파트] 84.96㎡	아파트	117,000,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주택수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할 때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각이 불가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명 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된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인으로 본다.
2. 매각기일: 2024. 8. 19.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2024. 8. 26. [일] 16:00
4. 매각장소: 순천시청 1108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식에 비추어 기밀유지요청서 기재된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남다른 보증금을 함께 입찰서류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 1회 [0원 선반]에 해당하고 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금 반환금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야 한다.
② 2인 이상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류의 투입이 종료된 후에는 개별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유를 최고가격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개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격 미달로 인하여 최저주택수신인인 매수신청보증금을 입찰장까지 출납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입찰방식에 비추어 기밀유지요청서 기재된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남다른 보증금을 함께 입찰서류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 1회 [0원 선반]에 해당하고 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금 반환금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야 한다.
② 차질된 대금지급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권을 상실한다. 한편, 매각대금으로 차질된 날의 3일경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에 미지급한 차액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미납시 매각권이 상실되어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적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적세영수필증확인서 및 등적세영수필증확인서, 국민주택특별명도변경등기 기재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등기비용이 위 등기를 축약하여 줄인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행위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 사항
① 매각의 효력은 상기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입찰인의 열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일이 1주일 전부터 매각결과 명세서, 현황조사일지 및 감정평가서와 사본 등을 우편법 민사집행 [신청서]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영문서 후 입찰서류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은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방식에 비추어 기밀유지요청서 기재된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남다른 보증금을 함께 입찰서류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 1회 [0원 선반]에 해당하고 보증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금 반환금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 및 인도는 매각대금 납부 후 매각대금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등기비용을 법원에 제출하면 등기비용이 위 등기를 축약하여 줄인다.
⑥ 공고된 물건의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 제외된다.
⑦ 신용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용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채무자,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www.court.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원상 제공가능한 정보에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할 것으로서, 즉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강력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게시된 매각기일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정광국